광양 황금지구 초교·무안 오룡지구 고교 신설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교육부 심사 통과…2026년 개교
원거리 통학 따른 불편 해소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광양 황금지구에 초·중학교 통합운영학교가, 무안 오룡지구에는 고등학교가 각각 신설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2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교육청이 요청한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와 (가칭)오룡고등학교 설립안을 승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신도시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학교설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황금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통합학교 완공 전까지 골약초·중학교에 분산배치 되는 황금지구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건부 승인했다.

교육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황금지구 내 초등학교는 2026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황금지구에는 내년 11월 2000여 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모두 6000여 세대가 둥지를 틀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황금지구의 초등학생 수가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해왔다. 황금지구에서 2km가량 떨어진 골약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다녀야 하는데, 학부모들도 거리가 먼데다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택지개발로 9000여세대가 입주하는 무안군 오룡지구에도 2026년 고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악신도시에 거주하는 수 백 명의 고등학생이 목포시와 무안읍으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다.

무안군은 오룡1지구에 이어 2지구에도 2026년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1000명의 학생이 유입돼 남악고등학교로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에 대해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23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을 반영해 학교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의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지역인 광양 황금지구와 무안 오룡지구(남악 신도시)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적기에 학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 골프장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광주일보 2022년 4월 28일자 6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골프존 카운티CC 순천에서 골프를 치던 여성(53)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골프존 카운티CC 순천의 40대 남성 사업본부장 A씨와 40대 여성 경기보조자(캐디) B씨다.

이들은 시설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경기 도중 이용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숨진 골프장 이용객은 공을 주우려고 혼자 연못 근처에 갔다가 물속에 빠졌다. 연못은 물을 모아두는 목적으로 만든 '저류형' 연못으로, 방수포가 깔려 바닥이 미끄러운데다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깔때기 모양으로 설계돼 있어 빠지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북구 공장 옥상 드론 추락 불

비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드론)가 공장 옥상에 추락해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소방은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한 공장 건물 옥상에 드론이 추락,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상 벽면 일부가 불에 타 35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10분여만에 자체 진화했다.

드론은 공장 주변에 있는 드론 연습장에서 출발해 비행하던 중 날개에 손상을 입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계림1동 마실길축제…자장면 대접

'제1회 계림1동 마실길축제가 29일 광주 동구 중흥로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를 맞아 계림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민들에게 자장면 150인분을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마실길 축제는 계림1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이름풀이로 군법회의 유죄 교사 41년만에 무죄

"전씨 10년째 총 두방으로 사망"
광주고법 재심선고 "정당 행위"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의 이름풀이를 해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았던 교사가 41년만에 무죄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광주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전두환의 이름을 한자 풀이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8월 10일 고3 학생들로부터 대통령 선거 절차에 관한 질문을 받은 A씨는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그동안 후보 출마자나 추대자가 단 한 명뿐이었고 90% 이상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추대 움직임이 있던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90% 이상 찬성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두환의 한자 이름을 칠판에 적였다.

A씨는 한자풀이를 하면서 "전씨가 8년간 왕을 한다"면서 "10년째 되는 해에 총 두 방으로 시해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만 인정돼 징역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과거사 사과의 일환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A씨에 대한 재판도 다시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 해수욕장 텐트서
2명 숨진 채 발견
1명은 부상 치료 중

영광의 한 해수욕장 주변 텐트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영광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 텐트에서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20대 남녀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고 30대 남성은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텐트 안에는 타다 남은 재의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다.

사망자 중 한 명의 가족이 "우울증이 있는 자녀가 연락이 안 돼 걱정스럽다"고 신고하자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경찰은 해수욕장 인근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캠핑을 하던 텐트들을 모두 확인했다.

해가 졌는데도 불빛이 없는 텐트를 발견하고 쓰러져 있는 3명을 찾았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입산 소고기 섞어 판
유명 곰탕집 주인 집행유예

수입산 소고기를 쓰고도 한우를 사용해 곰탕을 만들었다고 속인 나주의 한 유명 곰탕집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곰탕 요리에 쓰이는 양지나 아롱사태는 수입산과 한우의 가격이 2~3배 차이가 나지만,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 모두 국내산 한우만 취급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주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며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6000만원 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 58.8t을 구매해 한우와 섞은 뒤 '국내산 한우' 곰탕, 수육곰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와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